

한달앞 F1대회 올해도 교통대란 빛나

결승전 2만3000대 차량·관람객 10만여명 예상

가변차로·순환버스 반쪽 운영, 경주장 주차 제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 기간 중 '교통대란'이 빛어질 가능성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결승전이 열리는 10월 16일 하루동안 2만3000대의 차량과 10만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주가 끝난 뒤에만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방침을 세우는가 하면, 일반 관람객들의 경주장 내 주차를 엄격히 제한해놓고 정작 경주장 내 순환버스는 경기 종료 뒤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허술한 교통대책으로 지난해 대회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1 대회 조직위원회는 15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기간 중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부안군 일로읍 청호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간 7.2km)와 국지도 49호선(해남군 화원면~영암군 삼호읍 간 17km)를 임시 개통하고 가변차로와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해 관람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경주장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경주장 주변 5곳(2만2900면)에 환승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결승전이 열리는 16일(일)에만 2만3000대의 차량과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예선전이 열리는 10월 14일(금), 15일(토)에도 각각 7400여대의 차량과 3만명, 1만6700대, 7만명이 경주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하지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 개통 구간 흥보 대책이 미흡해 기존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다, 영산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가변차로(3.6km) 운영 정책도 경주가 끝난 뒤에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방조제 구조개선 공사가 한창인 구간에서 교통 대란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주장 내 순환버스 운영 정책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감안해 7개의 주차 공간(1만3000면) 가운데 메인그랜드스탠드에서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한 P1·P2 등 2개의 공간(5500면)만 일반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2000면만 개방하기로 해놓고 경주장 내 순환버스는 경기가 끝난 뒤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해 대회 홈페이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100만원에 이르

는 최고가 티켓인 메인 그랜드 스탠드 좌석을 예매했는데 경기 뒤에 아이들과 함께 도보로 움직여야 하느냐, 비라도 오면 주차장까지 걸어서 가라는 것인가"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회 흥보 대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주차장 운영 방침을 비롯해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간격, 주변도로 확장 정보, 대형 스크린 설치 장소, F1 상품판매소 위치 등 관람객들은 대회를 앞두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조직위가 적극적인 정보 제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대

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회 당일 현장에서 관람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더 큰 체증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내부 순환버스의 경우 퇴장시에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물리적으로 운행이 어렵고 경주장 진출입 구간이 작년과 달리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지난해와 같은 교통체증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교통 체증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교통 대책을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흥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F1 민·관 합동 평가기구 구성하자"

전남 경실련, 道에 제안

경제정의실천연합 전남협의회(목포·순천·여수 경실련)는 15일 F1대회 평가와 대안 검증을 위한 민·관 합동 평가기구를 구성할 것을 전남도에 제안했다.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F1대회 전망에 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가 확산하고 막대한 지방재 발행이 혼란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대회 전반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개발에 의한 약자 정주권 보호 등 포함

광주시, 110개 인권 지수 발표

지자체 최초... UN 인권도시 시동

개발에 의한 약자의 정주권 보호,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과 관용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 등이 광주시의 인권지수에 포함됐다. 또 평생교육 참여율,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등도 핵심지표가 됐다.

그러나 이들 핵심지표들의 통계가 애매 없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수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인권지수로, 향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자유로운 도시 분야에는 사상과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행정정보 청구 및 공개보장, 수형자에 대한 인권지침 준수, 개발에 의한 약자의 정주권 보호 등이, 삶이 안정된 도시 분야에는 결식이동 지원, 과증한 학습스트레스, 시민건강 수명, 비만 인구 비율,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노숙자 인구비율, 주거환경 등이 포함된다.

경 최저수준 미달가구 수 등이 세부 지표로 들어갔다.

또 폐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분야는 환경 피해 민원발생 및 해소율,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점자보드별 설치율등이, 차별 없는 도시 분야는 성폭력 및 성매매, 성 영향평가 추진과제 비율, 노인복지시설 이용률, 다문화 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이를 중 국가인권위원회 자문과 시민설명회, 인권증진심의위원회 심의, UN 최고인권대표사무소 자문 등을 거쳐 연내에 인권지수를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UN 인권도시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리스 쇼크... 금융시장 출렁

15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공포가 일어나면서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설에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요동치면서 8.00원 오른 1116.40원에 마감했다. 증권업계에선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로 빠져든다면 원·달러 환율이 최고 160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민감사청구 11년간 7건

3건은 '감사 부적합' 각하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7건의 청구서가 제출된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2건, 전남 5건 등 총 7건의 주민감사 청구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광주 광산구 빛고을을 임대한 주민은 청구서에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예산과 계약금을 차액으로 돌려주는 행정부의 부적합'이라는 내용을 담았지만 행정부는 이를 '부적합'으로 각하했다.

이후 광주 광산구는 예산과 계약금 차액을 차액으로 돌려주는 행정부의 부적합을 인정해 청구를 접수했다.

이후 광주 광산구는 예산과 계약금 차액을 차액으로 돌려주는 행정부의 부적합을 인정해 청구를 접수했다.

년, 순천시 종양지하상가 임대(2010년), 목포 세라믹 산단 조성(2011년) 등 3건은 '감사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순천시 하도 정비 사업 특례의혹(2002년), 여수 제2청사와 여수 해양수산청사 교환(2009년), 영암군수무지컬 영암아리랑 사업(2010년),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2011년) 등 4건이다.

이중 3건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 업체와 허가를 맡은 행정기관, 주민 간 심각한 갈등 속에 결국 허가 취소가 결정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광주시의 징계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차지단체의 권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주민의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 주민은 상대로 일정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희호 여사 식중독 증세 입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89) 여사가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15일 "이 여사가 지난 10일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 VIP 병동 특실에 입원했다"며 "상태가 호전돼 오늘 중으로 퇴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도 "식중독 증상으로 입원했다. 많이 편찮으신 것은 아니고 요양을 겸해서 입원 중"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퇴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태우 전 대통령 다시 입원

지난 4월 폐에 박힌 침 제거 수술을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동휘 비서관은 15일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환절기라 몸이 조금 안 좋아지셨다"며 "기침 등 증세는 약 처방을 받고 회복됐다"고 전했다. 문비서관은 "겁진도 받고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폐에서 한방용 침이 발견돼 같은 달 28일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달 25일에도 기침 증세로 입원한 바 있다.

/연합뉴스

ONLY 단하루!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확정!!

10월 15일 단하루!!

무안공항↔방콕·파타야5일

특급호텔 방콕·파타야 5일관광 589,000원

특급호텔 사용, 전통안마, 코끼리트래킹, 로얄드래곤

최특급호텔 JAU+ 방콕·파타야 5일관광 799,000원

특급 방콕·파타야 5일골프(54H) 1,099,000원

그린피, 캐디피, 전동카트, 증식포함

인천공항 출발

유럽

- 서유럽3국(프, 스, 이) 8일 1,690,000원~
- 서유럽5국(웅프라우) 10일 2,090,000원~
- 홈쇼핑 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동남아

- 방콕, 파타야 5일 449,000원~
- 세부 4/5일 349,000원~
- 보라카이 직항 5일 559,000원~
- 싱가폴 5일 659,000원~
- 5성급 캄보디아 5일 599,000원~
- JAU+ 베트남 캄보디아 6일 549,000원~
- 베트남 북부 5일 449,000원~

미주/남태평양

-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 시드니, 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10일 1,990,000원~

호주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제적인 일본여행 ~

뱃부3박4일	9/1~9/28	129,000원~
	10/2~12/21	179,000원~
야마구치3박4일	9/1~12/21	139,000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두암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조선대점 227-8255

진월점 382-5353

첨단점 233-2627

총장점 222-9796

하남점 954-9700